



2015 강원 건축문화제 및 시상식이 17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안병용

“강원건축 발전 힘모으자”

도건축사회 강원건축문화제 개막

강원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회장 최성두)는 17일 오전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최문순 도지사과 김시성 도의회의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하금현 강원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 등을 비롯

한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강원건축문화제’ 개막식을 가졌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강원건축문화상 대상을 받은 형제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허민구씨 등 12명의 수상자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또 어린이 집그리기 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한 정시우(동해 중앙초 3년) 군 등 96명에게 상장이 전달됐다.

최성두 도건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강원도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다”며 “후대에 지역 건축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주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문순 지사는 축사에서 “건축은 공간으로 표현되는 시대정신이며 현대사회에서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대표 건축물이 건축가들 손끝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춘천시 내년 예산 9597억 편성

당초보다 5.8%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관광·복지 예산 3209억원 집중 배정

춘천시가 관광 인프라 확충과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춘천시는 일반회계 7372억원, 특별회계 2225억원 등 총 959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 당초 예산보다 5.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다. 일반회계는 384억원, 특별회계는 143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국비 확보액도 2490억원으로 299억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관광과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관광 예산은 전년보다 27.8% 늘어난 607억원이다.

주요 관광 사업은 레고랜드 진

입교량 건립 지원(58억원), 진입교량 연결도로 개설(45억원), 양스카이워크 설치(42억원), 옛 캠프페이지 복합공원 조성 사전 추진(14억원) 등이다.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7.7% 증액된 2602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27%를 차지했다.

시립도서관 신축에 102억원, 강북노인복지관 신축 31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23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핵심 현안인 시청사 신축 사업비로 내년에는 외부 차입

없이 300억원이 배정됐다.

2017년까지 진행되는 시청사 인근 교동향교~중앙로1가도로 확장 사업에는 총 사업비(145억원)의 55%인 80억원이 반영됐다.

최동용 시장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강화, 국제관광 도시 발전 전략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 농촌지역 생활 및 복지 여건 개선, 시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아·태 건설인 화합의 장... 막 오른 '이포카대회' 제42차 이포카(IFAWPCA,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대회가 일본 도쿄 프린스파크타워 도쿄호텔에서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는 18개 회원국 5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Partnership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각국의 발표가 있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각국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3편
 도쿄=김정석기자 jskim@



17일 일본 도쿄 프린스파크타워 도쿄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이포카(IFAWPCA: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대회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가운데) 등 한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욱 이포카 아시아가 한국을 대표해 대한건설협회기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

아·태 건설단체 한자리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 찾다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18개 국가 건설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산업의 파트너십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했다. 제42차 이포카(IFAWPCA: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대회가 일본 도쿄 프린스파크타워 도쿄호텔에서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는 18개 회원국 5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하루 전날 지난 16일 이사회와 재정위원회 이어 17일 1회식과 제1차 총회, 18일 제2차, 19일 제2차 총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포카는 지난 1956년에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호주, 홍콩, 인

18국 500여명 대표단 참가 국가별 협력방안 등 논의 2017년엔 서울에서 개최

도, 뉴질랜드,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몽골, 캄보디아 등 18개 국가 건설협회들이 평화원으로 기념촬영했다.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민간 건설 국제기구로 약 13개월을 주기로 순회제로 개최지를 바꿔가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일본 대회는 'Partnership and

Sustainability(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를 주제로 총회와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등 5개 분과 상임위원회, 세미나, 비즈니스포럼과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교류 및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건설업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17일 제1차 총회에서는 대회 주제와 관련한 각국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19일 제

2차 총회에서는 건설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각국 건설인과 근로자, 각국 건설 산업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건설인들을 대상으로 공로상을 시상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오는 2017년 5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될 차기 한국대회에 대한 홍보영상 시연과 홍보책자 배포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된다.

한국대표단 단장인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아시아·서태평양지역 대표 건설 국제기구인 이포카 차기 대회가 우리 협회 7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정석기자 jskim@

박종웅 이포카 부회장 주제 발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민자사업 적극 활성화해야”

‘파트너십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 제42차 이포카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에 주목했다.

이날 제1차 총회에서 박종웅 이포카 제1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해 ‘한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정책과 프로젝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역사와 절차, 성과 등을 소개하고 민자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민자사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PPP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제약으로 인해 한국은 선택의 여지없이 PPP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정책과제는 적합한 PPP 시설을 늘려가는 것이며, 이보다 좋은 것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체계에서 민자사업에 부적절한 사업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PPP, 민자사업에 대해 “대중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의 PPP 시스템은 완벽하진 않지만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국내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활동을 통해 노후 인프라 재생산을 위한 재원조달과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인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과 RTO(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등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970년대 급속한 성장기에 지어진 도시 인프라가 현재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 때문에 시설물 안전 확보와 성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시설물 안전 확보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새로 지을지, 고쳐서 사용할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고쳐 써야 한다면 RTL이나 RTO 등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사업, 연내 확정해야”

강원도내 선출직들이 도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연내 확정을 위해 세종시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도의회는 도내 선출직 의원과 시장·군수들이 오는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확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기선 도국회의원협의회장과 정문현 국회의원, 김시성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최명희 시장·군수협의회장과 기초단체장, 정진권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과 기초의원 등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발언에 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이병선 속초시장과 김진기 속초시의장 등이 대표로 기재부를 방문해 성명서

강원도내 의원·시장·군수들 20일 세종시서 궐기대회 “미래수요 반영엔 경제성 더 높아져” 조기추진 촉구

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와 도 정치권은 올해를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에 이어 두 차례 열린 점검회의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만 거론해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 김시성 도의장과 해당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대응 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도 등에서 제기했던 주말 관광객, 오색로프웨이, 크루즈관광, 양양국제공항 관광 수요 등 미래 수요가 반영되면 과거보다 높은 경제성 분석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동해북부선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북극항로로 연결돼 러시아(유럽)·중국과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특히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올림픽 로드로서 자원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다. 경제성은 국토교통부의 대안 용역에서 이미 입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분석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거쳐 기본계획용역의 연내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도 정치권의 견해다.

김시성 도의장은 “도내 선출직들이 정과를 떠나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해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고, 사업을 조기 확정하지 못하면 또다시 장기과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도내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작업 속도내지만...

건설업계 옥죄는 '간접비' 정상화는 외면

4대 건설공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이행된 가운데 건설업계를 가장 옥죄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 이행과제도 신규 입찰공고분에 한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계속 사업은 불공정 계약 관행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들이 대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6면

하지만 건설업계를 짓누르는 공기연장

뾰족한 해법 없이 소송으로 대응 정부 정산기준 마련만 바라봐 기존 계약 '불공정' 방치도 문제

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4대 공기업들은 휴지기 편법 운영과 차수계약 간 과도한 간격 운영, 공사용지 미확보, 지장물 미철거, 문화재 발굴과 이전 민원 등 각종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연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

립 중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접비 지급을 위한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간접비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뾰족한 해법을 주지 않아 개별 소송으로 풀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내에서 간접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4대 공기업들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대부분 개선했지만, 이는 모두 관련규정을 개정한 이후의 신규 입찰공고분에 적용해 계속사업의 부당한 계약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사항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현재 시공 중인 건설공사는 기존 계약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계약도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결돼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신규 입찰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의 비정상을 방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정부가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공기업들이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업체에 시공평가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며, 가장 큰 문제인 간접비 분쟁 해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NEWS & 4대 공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막바지

예정가격 새 산정기준 내년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대부분 이행했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함께 건설업계를 옥죄던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연말까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음(-)의 복수 예가를 운영해 온 LH와 도로공사, 철도공단은 설계가격의 $\pm 2\sim\pm 3\%$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추첨할 계획으로, 관련지침을 개정 중이거나 마련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pm 2.5\%$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에 앞서 LH와 철도공단은 예가 산정 기준과 함께 공사비 부담 삭감 수단으로 지목된 설계변경 시 신규 항목의 단가를 삭감한 내부 규정을 삭제했고, 도로공사는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설계변경 시 신규 항목의 단가 협의를 피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 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10~15%를 감액해왔다.

LH·도로공사·철도공단 설계가격 $\pm 2\sim\pm 3\%$ 범위 복수 예가 추첨할 계획 수공은 ' $\pm 2.5\%$ ' 이미 적용

또 도로공사와 철도공단은 신규 터널공사에 가격지정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발주처 과업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각종 부당특약도 사라졌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시공사가 폐기를 처리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없앴고, LH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던 것을 입찰안내서에서 삭제토록 했다.

또 LH는 자체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80

점 미만의 시공사에 과도하게 최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부당특약을 폐지했다.

철도공단은 이의제기 후 30일 이후 소제기가 불가하던 소송 제기 권한 제한을 개선했고, 도로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일시 납부토록 하던 것을 국가계약법령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납부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철도공단은 계약 종료 후 대가 지급 없이 관행적으로 추가 업무를 요청하고, 공사기간 중지 또는 연장 시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대가 미지급 등도 발주부서에 하달해 금지토록 했다.

또 공사비에 범상 요율에 따라 신규공사 설계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앞서 요율이 하향 적용한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은 설계변경을 거쳐 개선했다.

채희찬기자 chc@

노동계, 공사 분리발주 반대목소리

현장 관리직 노조 “공사일정 지체되고 하자책임 불분명” 전문업계 “제도 이해부족... 운용의 묘로 문제 해결 가능”

공공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노동계 차원의 ‘반대의사’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다. 공사일정 지체, 부실시공, 하자 책임 불분명 등의 부작용이 현장 ‘관리직’ 노조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심화’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에 반대하던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업계는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 및 서울시 등 정치권과 공공 발주처를 접촉하며 ‘분리발주’를 건설현장에서 금지하기 위한 물밑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 사무직 및 현장 관리직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기업노조는 ‘을지로 위원회’와는 분리발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와는 업무협약을 맺어 SH공사 현장에 시범적으로 분리발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아직 명문규정이 없어 일괄발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기, 부산, 전남 등 주요 지자체 10곳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조례로

공포하는 등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기폭제로 전문건설업체 차원의 분리발주 확산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당시 건설 일용근로자 노조 단체인 ‘건설노조’는 ‘처우 불안정 심화’, ‘전문건설사 간 재하도급’, ‘영세전문업체의 산재처리 불투명’ 등의 문제를 들며 반대했다(본지 1월7일자 보도).

1년이 지난 현재, 이번엔 건설현장관리 직원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관리직, 주요 공종 분리발주 반발 기업노조 소속 H건설사 현장 소장은 “전체공정 중 주요 공종을 분리발주하면 공사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또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어느 공종에서 원인이 있는지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장 관리직들의 고충은 현재 시행되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뿐 아니라 발주처의 중소기업 제품 관급자재 제공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발주처 L사나 S사는 ‘배관’, ‘엘리베이터’, ‘창호’ 등의 관급자재를 제공하면서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토록 해 결과적으로 분리발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중견 건설사 현장 소장은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공종이 안 끝나면 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또 시공 후 누수가 발생하면 배관, 골조, 설비 중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리발주가 전면 허용되면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업계 “공종별 기능 분담은 필수”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전문업계는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다양한 공종과 자재, 공법, 신기술, 신공법 등이 망라되는 복합산업인데, 공종별로 기능이 분담·전문화되는 건 필수”라고 밝혔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노동계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분리발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면 대부분 일거에 해소될 문제이고, 책임소재나 공기 지연 문제는 제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기업노조는 현장관리직이 많은 만큼 노동자라기보다는 사측 입장에 더 가깝다”면서 “공사일정 지체나 책임소재 불분명 같은 주장은 종합건설사 측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공사업은 분리발주가 된 후로 시중 노임단가가 다른 공종보다 높아지는 등 노동자 처우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기자 ysys@